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2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서범수 · 조수진
백종헌 · 박덕흠 · 안병길
홍석준 · 이채익 · 최연숙
서병수 · 태영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단체·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행사 주체가 명확한 지역축제와 달리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‘자발적으로 연 행사’의 경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.

이에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‘흑고니(Black Swan)’ 유형의 재난 대비를 위해 주체·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, 행사 등 ‘다중운집행사’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·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자 함(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제1항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1항 본문 중 “치료”를 “치료(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제66조의11제1항 중 “지역축제를”을 “지역축제(다중운집행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②・③ (생 략)</p> <p>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지역축제</u>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②・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----- ----- -----<u>지역축제</u>(다중운집행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